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북한 외교·안보 담론의 특징과 함의

Online Series

2023. 12. 07. | CO 23-38

서 보 혁(국제전략연구실 연구위원)

북한이 11월 21일 밤 ‘만리경-1’호라 불리는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이후 외부에 여러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핵능력 고도화 조치를 일관되게 전개하면서 한국과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제재 레짐에 맞서고 있다.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은 핵탄두 양산 및 그 운반수단의 다변화와 결합해 핵능력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적대세력의 선제 핵공격에 대한 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정찰위성 발사 이후 2주간 북한의 외교·안보 담론을 분석해 그 특징과 함의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중 핵효과 기대

북한은 정찰위성이 성공리에 발사되어 위성 촬영을 잘 하고 있고, 12월 2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가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 등 북한 관영언론은 ‘만리경-1’호가 촬영한 항공우주사진이 △ 태평양 지역 괌 앤더슨 공군기지와 아프라항, 하와이 진주만 해군기지와 호놀룰루 히캄 공군기지, 미국 버지니아주 노포크 해군기지와 뉴포트 뉴스조선소 등 미군의 주요 군사기지 구역과 핵항공모함 4척, △ 목포, 군산, 평택, 오산, 부산, 서울 등 남한의 중요 표적 지역, △ 워싱턴의 백악관, 펜타곤 등을 망라한다면서 정찰위성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찰위성 발사 이후 북한은 김정은을 비롯해 주요 인사와 기관들이 나서 위성 발사의 당위성과 그 위용을 과시하는 선전에 가담하였다. 가장 많은 언론 노출을 한 인사는 김정은이고, 이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김선경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 국방성 장비총국 부총국장



등이 나섰다. 기관으로는 외무성, 국방성은 물론 위성 발사 실무기관인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도 나서 미국을 비난하고 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김정은은 11월 21일 정찰위성 발사장 참관에 이어 22일, 24일, 25일 평양종합관제소를 잇달아 방문하고, 23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관계자들 및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등 정찰위성 발사 및 운용에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김정은이 이렇게 정찰위성 발사에 환호하는 것은 앞서 말한 이중 핵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정찰위성이 “적에 대한 가치 있는 실시간 정보를 풍부히 제공하고 대응태세를 더욱 높여나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이한 점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에 신설된 정찰위성운용실이 독립적 군사정보조직으로 신설된 사실이다. 이 기구는 “획득한 정보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해당 상설집행부서에 보고한 뒤 지시에 따라 중요부대와 군 정찰총국에 제공한다”고 알려졌다(조선중앙통신 2023.12.3.).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북한측이 발신하는 대내적 메시지는 위성 발사를 성공시킨 김정은과 노동당의 지도력을 찬양하고, 관련 기관의 능력을 자화자찬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11월 23일 “정찰위성의 보유는…적대세력들의 각양각태의 위협천만한 침략적 행동들을 주동적으로 억제하고 통제관리”하는 데 유익하다고 하면서, “추호도 양보할 수 없고 순간도 멈출 수 없는 정당방위권의 당당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의도적 긴장 조성

외교·안보 측면에서 정찰위성 발사 이후 북한은 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미국의 ‘이중잣대’를 비난하면서 남북 대결과 군비증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한반도 차원에서 북한이 내놓는 메시지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 직후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과기할 의사를 밝히면서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북한 국방성이 11월 23일 발표한 성명이 대표적이다. 이 성명은 △ 북한 군대는 9.19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 △북남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중지하였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 △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남한이 책임지게 될 것 등 3개항의 입장을 밝혔다. 이중 두 번째 사항과 관련해, 국방성 성명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배치할 것이다”라고 밝혀 긴장 조성을 예고하였다. 이후 북한군은 군사분계선 일대 전역에서 감시초소를 재설치하고 해안포를 개방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 이후 남한 정부를 비난하며 군비증강과 대결 분위기를 지속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북한은 위 국방성 성명에서 남한을 “대한민국것들”이라고 폄훼하였다. 북한 관영언론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기판매를 “제 배를 불리우는 것과 함께 저들의 《안전》을 지켜줄 《충견》을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라고 강변하였다(조선중앙통신 2023.11.25.). 또 북한은 국방성 대변인 담화(11.16.)와 국방성 장비총국 부총국장 입장문(11.20.) 등을 통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첨단 무기수출을 “전쟁수출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전쟁억제력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 다음 날(11.22.) 한국 국방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발표한 것을 두고 “마지막 안전핀마저 제 손으로 뽑아버린 망동”이라고 비난하고(조선중앙통신 2023.11.30.), “《대한민국》 것들은 북남 군사분야 합의를 파기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로동신문 2023.12.3.). 특히, 12월 3일 「로동신문」에 실린 군사논평의 논리는 주목할 만하다. 이 논평원은 남한이 군사합의서를 오랫동안, 다방면에서 위반해왔다고 하면서 여러 사례들을 열거한 후에 “지난 5년간 유지되어오던 군사분계선 완충지대는 완전히 소멸되고 예측할 수 없는 전쟁발발의 극단한 정세가 팽배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군사합의서에 정찰위성 발사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언급하면서, 남한이 합의서 일부 효력정지를 발표한 것은 “민간단체를 대신해 앞으로 군부가 직접 무인기를 이용한 대북심리전을 본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앞으로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긴장을 높일 것임을 시사해준다. 우발적 충돌을 피하고 의도적 위기조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자주권’, ‘이중기준’ 논리로 정찰위성 선전

국제적 차원에서 북한이 내놓고 있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는 주장이다. 북한 외무성 김선경 국제기구담당 부상이 11월 2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 북한의 입장이 잘 나타나 있다. 우주발사체를 금지하는 국제법이 없고 북한의 우주발사체는 방어적 목적인데,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북한의 조치를 비난하는 것이 “극도의 편견과 이중기준”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내놓고 있는 두 번째 대외 메시지는 대결 우선, 대화 보조의 자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견지해오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1월 29일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을 “강권과 전횡의 극치인 이중기준과 더불어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악성인자”로 규정하면서도 대화의 여지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미국이 선호하는 《힘을 통한 평화》라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같이 준비되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 더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한 대미 입장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12월 2일 국방성 대변인의 담화는 미국을 비난하고 ‘선전포고’까지 언급하였다. 이 담화에서 북한 군부는 북한의 군사 표적을 감시하는 미국의 정찰위성이 “우선적인 소멸대상으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 이후 서방국가들의 규탄 및 추가 제재 움직임을 비난하며 북한식 제재 방침을 발표했다. 북한 외무성은 12월 3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공화국 대응조치법에 따라 대조선 제재정책의 립안과 집행에 관여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인물들과 기관, 단체들에 대하여 대응조치들을 적용한다는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일종의 북한판 제재가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에 따른 자신감의 발로인지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차가운 평화

북한의 발표에 의하면 군사정찰위성은 11월 22일 발사가 첫 성공이고, 북한 스스로 추가 위성 발사를 예고하였다. 김정은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12월 하순으로 예상되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제의할 ‘항공우주정찰 능력 조성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1월 23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항공우주정찰 능력 조성의 당면 목표와 전망목표’를 향해 계속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북한이 우주에서도 군비증강을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등 정찰위성 운용에 관여하는 군수 분야 엘리트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군사정찰위성의 추가 발사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한국과 미국의 탓으로 돌릴 것이다. 한국과 미국을 묶어 비판하면서도 대미 메시지에는 ‘대화에는 대화, 대결에는 대결’을 표명하며 분열 전술을 시도할 수도 있다. 북한이 전개하는 군비증강 드라이브와 한미동맹 분열 기도는 한국에 안보 딜레마를 가중시킬 수 있다. 확고한 안보태세와 긴장완화 노력으로 차가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당면 과제이다. ©KINU 2023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